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검토… 高환율 대응 나서

구윤철 부총리, 환율 안정 논의
연간 650억弗 외환스와프 올해 만료
수출기업 외환보유 규모 등 점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마련키로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응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과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70.6원)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주간 거래를 마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도로 맺은 기존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일부로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이 계약하에 해외자산 매입 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국가 보유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는 이점이 있어,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기재부는 또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측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최근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반 전 거래일 증가 대비 5원가량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반등하며 1469.9원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전일대비 0.7원 내렸으나 여전히 1470원 선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이다.

환율은 증가 기준으로 지난 9월24일 1400선을 넘어섰고, 11월7일부터는 1450선 위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를 통해서 시작하기로 했다.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가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I전환, 새 성장동력… 세계경제 중저속성장 ‘뉴노멀화’”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 전망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 예상
내년 성장을 전망 3.0%로 상승”

세계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불확실성 속에도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세계 경제가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 현황을 짚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과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글로벌경제부장이 주제 강연을 맡았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관세의 파급 효과는 당초 예측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고,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상은 관

세 여파가 소비자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 추진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폭은 연초 예상보다는 다소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고,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세계 성장을 전망률을 끌어 올렸지만, 일각에서는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2026년에도 세계경제는 불안한 성장 동력 속에 중저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세계경제 동향 및 2026년 전망’ 강연에서 “2025년 세계 경제는 관세 발(發) 불안에 적응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인다”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는 최저

수준을 지속 중이지만, 하반기에는 AI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상호관세 직후 2.7%였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3%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교역은 연초의 우려보다 양호하지만, 4분기 들어 위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도 부진하고 급격한 무역 위축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4분기에는 높은 미국의 실효 관세 부담과 밀어내기 수출 종료로 글로벌 무역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둔화세를 지속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제한되며 중·저속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AI와 반도체의 수요 및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종전의 2.5%에서 3.

0%까지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기폭요인이 발생한다면 경기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재부각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별로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는 가운데, 금리는 중간 지점으로 수렴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면서 “미국이 3회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금리 동결, 일본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년 세계 무역은 관세 가격 전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장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무역량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의 과잉생산 억제, 전통기업의 구조조정 등은 무역활성화를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제금융정책자문위’ 경제부총리 직속 출범

“위기시 외채상환 요구 대응
견고한 대외 안전판 갖춰”

경제부총리 직속의 민간자문위원회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 자문위는 국제금융 및 외환 정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 더해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자문위 발족과 관련해 “위기 발생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 이전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 흐름의 불균형이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및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또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국내유입)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5대 은행,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
신용대출 잔액 1.5조로 8315억 ↑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이다. 은행의 총량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1조5125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6월 6조7536억원 ▲7월 4조1386억 ▲8월 3조9251억원 ▲9월 1조1964억원 ▲10월 2조5270억원으로 줄고 있다. 9월보다 10월 증가폭이 큰 것은 정부대책 이전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611조2857억원으로 전달보다 6396억원 늘었다. 전달 증가폭(1조661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관련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6월 5조7634억원 증가한 주택관련 대출은 7월 4조5452억원으로 줄었다. 10월 1조6612억원 증가했던 주택관련

대출은 11월 6396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6·27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의 금융유동성을 차단한데 이어 10·15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묶은 영향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5646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8315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7월 -4333억원, 8월 1103억원, 9월 -2711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9월 9151억원, 10월 8315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기존에 개설됐던 유동성 대출(마이너스통

장)의 사용액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이라며 “사용된 금액의 정확한 사용처는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과 주택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사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에는 은행의 총량규제에 따라 은행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2일 비대면, 24일 대면 주담대 신규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우리은행은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한 달 10억원을 제한 중이다. 2금융권인 수협과 신한협도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